

#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과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김희민 · 송두리 · 성예진 | 서울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 특정 부분에 대하여 조명한다. 첫째, 최근 몇 년간 진보-보수 이념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균열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각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념 성향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들과 온건 성향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르게 평가하는지도 분석한다. 둘째, 한국도 서구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선거에서의 승자(즉, 여당지지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한국의 주요 정치균열인 지역균열이 승자-패자의 논리에 따라 민주주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중 가장 최근의 두 웨이브인 2005년의 웨이브5와 2010년의 웨이브6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집권당의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평가가 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있어 민주주의의 평가는 정부 혹은 여당에 대한 만족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민주주의 평가를 살펴보면, 집권당이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기 보다는 그 경쟁 지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긍정효과라기 보다는 부정효과라 볼 수 있다. 이념의 극단성은 지지정당변수와 상관없이 민주주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 개인인의 이념 성향은 집권당 지지와 거의 유사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베이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주제어 | 민주주의 평가, 이념 성향, 이념의 극단성,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 세계 가치조사

## I. 들어가며

정치학 연구의 큰 흐름 중 하나로 민주화(democratization) 연구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제 3의 물결 이후 전 세계 과반수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분류되었고(Huntington 1993) 비자유 국가들의 자유화, 더 나아가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제도적 수렴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20세기 후반부터 학계의 연구 판도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민주화의 문턱을 넘은 다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민주적 제도 운영과 가치 확산의 양상에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정치학 연구자들은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 패러다임을 넘어 어떠한 정치체제인가, 또는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Carothers 2002).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 나아가 정치체제의 운영과정과 성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질적 특성 연구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해왔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 첫째, 민주주의 성취도에 관한 연구 중 유권자들과 정치지도자들 사이의 이념의 조응성(congruence)에 관한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와 정부가 시민들의 선호를 얼마나 잘 대표해내는지에 따라 체제의 수행력(performance)을 평가하고 있다(Kim et al. 2010; McDonald et al. 2004).

둘째, 전자의 연구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민주주의의 수행력을 구성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에서 측정하려는 경향 역시 존재한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연구들은, 체제 내 다수파를 형성하는 방식으로서의 선거제도(단순다수제 또는 비례대표제)와 선거 결과에 따라 정해진 개인의 입장(승자 또는 패자)이 민주주의 만족도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선거 이후의 정부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Anderson and Guillory 1997; Anderson and Tverdova 2001; Linde and Ekman 2003).

셋째, 그동안 주로 행정학의 연구 대상으로 여겨졌던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과 거버넌스 연구(Agnafors 2013; Fukuyama 2013; Rothstein 2008), 마지막으로, 제도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국민행복도

연구(Dorn, et al. 2007; Frey and Stutzer 2002; Napier and Jost 2008)가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민주적 정치과정에서의 투입 뿐 아니라 산출,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경험적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민주화 이후 2007년 “두 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two turnover test)”에 성공하여 대만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우리 동네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our town)”으로 간주하는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며 체제 전환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실제 정권운영과 민주적 제도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현실 체제의 작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축적될 경우 개별 정권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민주주의 체제 운영에 대한 실망감의 증대와 지지의 약화, 나아가 민주적 통치의 정당성 약화와 불안정성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그에 만족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조명하려 한다. 첫째,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사회의 주요 균열로서 좌우 또는 진보-보수 이념갈등이 확립되어 정치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Kim et al. 2008.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또한 시민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진보-보수 성향의 방향성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에 더해, 이념 성향의 극단성이 민주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할 것이다. 즉, 이념 강도에 따라 극단적 이념 위치에 있는 시민들과 온건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민주적 통치 성과를 다르게 평가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둘째,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승자-패자의 논리, 즉 선거에서의 승자(즉, 여당지지자)가 패자에 비해 정권의 민주적 통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논리가 한국적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승자-패자 논리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으나(조영호 외 2013),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과는 다른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존의 연구 모델과 다른 모델을 구성하여 분석을 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교 서베이 연구가 연구 대상의 설문자료에 포함된 한정된 문항만을 검증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특정 변인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민주주의 평가 연구에서의 승자-패자의 논리를 한국 정치의 주요 균열 중 하나인 지역균열과 함께 고려하여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민주주의 평가와 이념 성향, 이념의 극단성, 승자-패자의 논리와 지역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 가설을 설정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분석 대상의 데이터를 소개한 뒤 연구 모형의 설정과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통계적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함의(implication)를 논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

### 1. 민주주의 평가

민주주의 평가 또는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앤더슨과 길로리(Anderson and Guillory 1997) 이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비교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Linde and Ekman 2003; McAllister 2008). 민주주의가 한 국가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민주주의 만족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지지와 특정 정권에 대한 지지 사이에 놓인 개념으로서 민주적 정부의 정치적 성과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다(Aarts and Thomasson 2008; Anderson and Guillory 1997; Blais et al. 2017).<sup>1)</sup>

1) 그 표현의 차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평가’와 ‘민주주의 만족도’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민주주의 평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인식에 가까운 반면, 만족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민주주의의 심화와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치적 자양분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그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해지게 된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정치제도 또는 선거제도(Helliwell and Huang 2008),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채택 여부(Frey and Stutzer 2002), 자유나 민주주의의 수준(Bjornskov et al. 2008; Dorn et al. 2007), 정치나 선거참여, 법치, 평등 등을 보장하는 제도(Wagner et al. 2009)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 요인을 민주주의 평가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홍재우(2006)가 세계가치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주주의 평가 방식을 원칙, 성과, 제도, 공직자라는 네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 지표에 대통령제와 내각제, 연방제와 단방제,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 등의 민주적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강신구(2012)는 한국 시민들의 민주적 제도 지향과 민주주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여 합의제적 가치체계를 가진 시민들이 현실의 민주정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내었고 이는 다수제적 특징이 강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제도와의 부조응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강우진(2013)은 법의 지배, 책임성, 반응성과 같은 정치적 수행력에 대한 평가가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와 관련된 주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정치적 요인뿐 아니라 비정치적 요인들도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재정상태 만족도(Curini et al. 2014; Farrell and McAllister 2006), 종교 활동 혹은 신앙심의 정도(Frey and Stutzer 2002), 국가의 인권 상태에 대한 인식(Hofferbert and Klingemann 1999)과 같은 요인들이 민주주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다. Kang(2015)의

---

도는 현 시점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따라서 현 정부에 대한 인식이 보다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평가를 측정하는 세계가치조사의 실제 문항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고,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평가라고 해석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기존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 평가’라는 개념을 단독으로 연구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고, 민주주의 평가와 만족도가 민주주의 수행력에 대한 인식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학계에서 혼용이 되고 있어, 이 논문에서도 ‘평가’와 ‘만족도’를 굳이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경우 민주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에 주목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복지 체제에 대한 불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2. 이념과 민주주의 평가

민주주의 평가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이념 성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정치적 요인들은 주로 정치제도, 선거제도, 자유를 비롯한 거시적인 지표와 관련된 것이었다. 반면 이념성향은 상대적으로 미시적 수준의 개인적인 태도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민주주의 평가 또는 만족도는 시민 개인의 심리적 정향이기 때문에 개인의 태도와 관련된 변수가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주로 서구 사회의 연구에서, 다수 학자들은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진보 성향의 시민들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Napier and Jost 2008; Taylor et al., 2006; Tavits 2008). 이러한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종교 성향과 관련이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 보수적인 시민들이 진보적인 시민들보다 더 종교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현실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rey and Stutzer 2002). 둘째로, 보수적인 시민들이 진보적인 시민들 보다 더 소득이 높을 확률이 높고, 소득과 민주주의 평가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보수라는 개념의 정의 자체가 현상에 만족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이념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민들은 현실의 민주주의를 더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Napier and Jost 2008).

이념에 대한 이해나 그 의미가 서구사회와는 다른 한국에서 주로 서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위의 주장들이 맞아 떨어질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단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 뒤,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이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이념성향의 극단성이 민주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인 이념 지표가 이념의 방향성을 나타낸다면, 이념 극단성의

개념은 개인의 이념성향이 그 중위 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존 연구들은 극단적 이념 태도가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린버그와 요나스(Greenberg and Jonas 2003)는 양 극단에 위치한 시민들이 자기의 견해에 더 집착하는 반면, 중도에 위치한 시민들은 더 사고가 유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맥클로스키와 충(McClosky and Chong 1985)은 이념적으로 극단에 있는 시민들이 주류(mainstream) 정치인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분노가 더 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선호가 정책입안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체제가 그러한 극단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표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의 민주적 통치 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주류 정치가 극단적 이념 성향의 시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간주되는 경우,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강화될 것이다 (Paskeviciute 2009).

한국 유권자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념 성향과 이념의 극단성 그리고 민주주의 평가 간 관계에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연구 결과가 한국적 맥락에서도 유효한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념과 민주주의 평가 간의 관계에 대하여 선형 및 비선형적 관계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시민들이 진보적인 시민들 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가설 2.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시민들은 온건한 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 3. 승자, 패자와 민주주의 평가

한편 기존연구들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 혹은 만족도가 민주주의 제도의 실행 원칙과 원리(democracy-in-principle)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실제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in-practice)로서 현실의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또는 정치과정의 결과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인 선거의 결과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상당 수 진행되어 왔다.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의 승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패자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던 집권세력의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권에 대한 지지 뿐 아니라 특정한 정책결과가 발생하게 마련인 민주주의 체제의 작동원리에 대해 승자-패자의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의견이다. 즉, 지난 선거에서 현 집권당에 표를 던졌거나 집권당을 현재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민주주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Anderson and Guillory 1997; Anderson and Tverdova 2001; Campbell 2015; Linde and Ekman 2003; Singh 2013).

승자-패자 논리에 대한 선구적 연구인 앤더슨과 길로리(Anderson and Guillory 1997)의 연구는 선거행태와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다루었다. 이들은 선거 결과 구성된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의 위치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앤더슨과 길로리는 이에 더해 다수제적/합의제적 정치 제도가 승자-패자 논리의 강화 또는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최소승리 연립정부의 유무, 행정부의 권력 독점의 정도,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 사회가 당면한 이슈의 수, 그리고 선거제도의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의 정도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레이파트(Arend Lijphart 1999)의 합의제-다수제 지표(consensus-majority index of democracies)를 사용하여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연구 결과, 승자-패자의 논리는 선거제도로써 합의적 제도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보다 다수제적 제도인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국가의 시민들 사이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 다수제적 제도 하에서 승자와 패자 간의 민주주의 만족도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선거과정·결과와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가 서로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가 이어져왔다. 달버그와 린드(Dahlberg and Linde 2016)는 단기간이 아니라 선거와 선거 사이의 장기간 동안에도 승자-패자의 논리가 민주주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블레이크스와 젤리노(Blais and Gelineau 2007)는 지역단위와 전국단위의 선거 여부나 선거에서의 기대감의 정도와 상관없이 승리와 패배가 민주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였다.

한국과 같은 신생 민주주의의 경우 민주주의 평가가 승리와 패배에 의해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 비해 더 중요할 수 있다. 대표자 선출 과정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과정이 사회 내에 정착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시민들에게 패배와 승복의 원칙이 체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의 불만이나 소외감, 집권 세력에 대한 낮은 지지 등이 체제와 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정도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한국은 다수제적 성격이 강하고, 양당제 경향이 강하여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강신구 2012; 문우진 2016; Lijphart 1999). 이에 따라 선거 결과에 걸린 정치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클 것이며 따라서 한국에서는 승자-패자의 논리가 민주주의 평가에 보다 잘 적용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과 마찬가지로 조영호·조진만·김용철(2013)의 연구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자들이 패자들에 비해 민주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그에 더해 한국정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균열에 따른 승자-패자 논리가 민주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화 이후 여러 정치균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행태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당 간 지역분할구도와 지역투표의 토대는 지역감정과 같은 정서적 요인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용철·조영호 2015; 지병근 2015; 최준영 2008) 지역 별로 정치적 자원의 분배가 선거 결과와 연계될 가능성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의해 승자와 패자의 지역을 나눌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균열이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3. 현 집권당의 지지자들이 야당 지지자들보다 민주주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가설 4. 집권당의 지역적 기반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그 경쟁 정당의 지역적 기반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sup>2)</sup>

### III. 데이터, 방법론 및 변수 조작화

이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이 시민들의 이념 성향, 이념의 극단성, 지지 정당과 지역 변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이며, 가장 최근에 수집된 웨이브5(2005년)과 웨이브6(2010)의 한국 관련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다. 각각의 샘플 수는 1190, 1158 명이다.<sup>3)</sup> 각 모델의 분석방식은 OLS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이다. 세계가치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민주주의 평가에 관한 질문의 정확한 문구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다. 이 질문은 각 국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나 제도의 수행능력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질문으로서 체제의 민주적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Linde

---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계가치조사의 2005년(웨이브5)과 2010년(웨이브6) 데이터가 수집되던 당시는 열린우리당(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던 시기였으며, 가설 3과 4의 정확한 워딩은 이들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데이터를 수집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3)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세계가치조사의 웨이브5와 6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 전에 수집되었던 웨이브1부터 웨이브4까지는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특히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민주주의 평가”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세계가치조사의 웨이브는 현재까지는 5와 6밖에 없다.

and Ekman 2003; Norris 2011). 민주주의 평가 질문은 10점 척도로서 응답자들에게 1=“전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지 않다”에서 10=“완전히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 사이의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석모델은 총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모델은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민주주의 평가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계가치조사에서 설문하는 이념 문항은 총 10점 척도로서 1점이 ‘아주 진보적’이며 숫자가 커질수록 보수적으로 측정하여 10점이 ‘아주 보수적’이다.

두 번째 모델에서 주목하는 독립변수는 시민들의 이념 성향의 극단성이다. 이념의 극단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념의 원 점수에서 중도값인 5.5를 뺀 점수를 제공값을 취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변수 조작화는 이념적으로 온건 성향과 극단 성향이 민주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념 극단성과 민주주의 평가 사이에 비선형적(curvilinear)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sup>4)</sup>

세 번째 모델은 집권당 지지 여부가 시민들의 민주적 통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조사의 웨이브5, 웨이브6이 조사된 시기인 2005년과 2010년 당시 한국의 집권당을 지지했는지 여부를 조작화하여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 질문에 2005년의 경우, 열린 우리당이라고 응답하면 ‘집권당 지지 = 1’,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으로 응답하면 ‘집권당 지지 = 0’으로 코딩하였다. 2010년의 경우, 한나라당이라고 응답하면 ‘집권당 지지 = 1’,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기타 등으로 응답하면 ‘집권당 지지 = 0’으로 구성된 이항변수(binary variable)를 만들었다<sup>5)</sup>.

네 번째 모델은 세 가지 주요 독립변수인 이념 성향, 이념의 극단성과 집권당 투표여부를 모두 포함한 통합 모델로 구성되었다. 각 모델에서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지역변수의 유의미성이다. 지역변수의 조작화는 거주지역과 출신

---

4) 이념의 극단성을 측정할 때 자주 쓰이는 또 다른 척도로서 이념의 원점수에서 이념의 중위값인 5.5를 뺀 후 절댓값을 취한 점수를 독립변수로서 분석모델 집어넣어 보기도 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 절에 나오는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5) 집권당 지지 변수(웨이브5의 V231과 웨이브6의 V228)의 정확한 위당은 다음과 같다. “내일 총선이 실시된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지역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토대로 하였다. 거주지역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계가치조사 데이터셋이 거주지역 변수만을 제공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에 관해선 지역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 중 출신지를 대표하는 정당에 대한 심리적 충성으로서의 “전통적” 지역주의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로서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새로운” 지역주의로 구분하는 연구가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강원택 2010). 이항변수로 구성한 각 지역변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베이스로 하여 포함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비교연구에서 정치제도, 선거참여, 법치, 평등 등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민주주의 평가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Wagner et al. 2009 등). 본 연구는 단일국가에 관한 연구이므로 거시적인 제도변수 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참여 수준과 개인이 평가하는 인권 상황 등 미시 변수를 중심으로 통제변인을 설정하려 한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정치 참여는 일반적으로 관습적 정치 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관습적 정치 참여의 대표적 유형인 선거의 경우, 선거에 참가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Hobolt 2012). 서명운동이나 시위 등 비관습적 정치 행동은 비판적 시민의 행동 특성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또한 민주주의 평가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송두리 2014; Norris 1999). 호퍼버트와 클링지만(Hofferbert and Klingemann 1999)은 국가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였다. 위의 사전 연구를 근거로 선거 참여, 선거 외의 정치적 활동 참여,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모든 모델의 통제변인으로 삽입하였다.<sup>6)</sup>

6) 정치참여 경험 문항들(웨이브5의 V96~V99, 웨이브6의 V85~V88)은 3점 척도로 응답하게 구성이 되었다. ‘1=참여한 적이 있다.’ ‘2=참여할 수도 있다.’ ‘3=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들을 정치 참여의 빈도가 높을수록 숫자가 커지도록 역코딩한 후, 다음과 같은 4개 문항들 - ‘탄원 혹은 진정서에 서명’(V96, V85), ‘보이콧에 참여’(V97, V86), ‘평화적 시위에 참여’(V98, V87), ‘파업에 참여’(V99, V88)의 응답을 더하여 정치 참여와 관련된 0~8점의 합성 지표(composite index)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선

이 같은 요인들 외에도 대부분의 만족도, 민주주의 평가, 행복도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재정상태 만족도가 민주주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Curini et al. 2014; Farrell and McAllister 2006). 이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개인의 재정상태 만족도와 인권 인식, 정치참여 변수를 통제변인으로서 모델에 포함하였다. 추가적으로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또한 통제하였다<sup>7)</sup>.

####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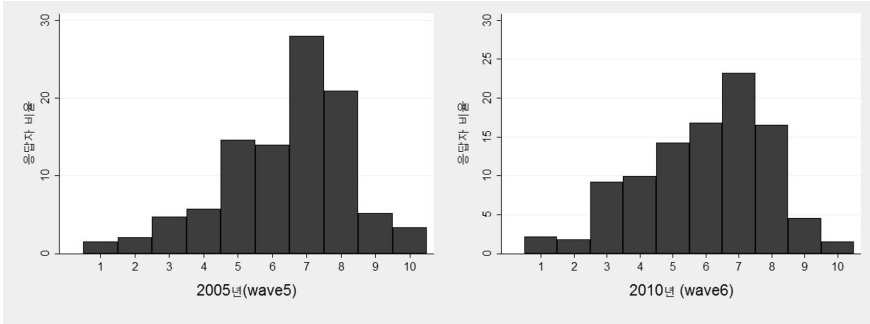
본격적인 회귀 분석에 앞서 몇 가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은 2005년과 2010년에 측정한 민주주의 평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분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6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둘째, 2005년에 비해 2010년의 민주주의 평가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각 설문 조사의 샘플

---

거참여 빈도 문항들(웨이브5의 V234, 웨이브6의 V227)은 웨이브에 따라 약간 다르게 측정되었다. 웨이브5에서는 단순히 “귀하는 2005년 총선에 투표를 하셨습니까?”라고 이분법적으로 묻는 반면, 웨이브6에서는 “00님께서 선거 때마다 얼마나 자주 투표하십니까?”의 형태이며, 이에 대한 답변은 ‘1=항상 투표한다.’ ‘2=가끔 투표한다.’ ‘3=전혀 투표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브6의 ‘항상 투표한다’와 ‘가끔 투표한다’를 1로, ‘전혀 투표하지 않는다’를 0으로 코딩하여 웨이브5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 형태로 변형하였다. 우리나라 인권 평가(웨이브5의 V164, 웨이브6의 V142)는 “00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점 척도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매우 존중된다.’ ‘2=존중되는 편이다.’ ‘3=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4=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1, 2를 묶어서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3, 4를 묶어서 부정적인 평가로 이분한 더미 변수(0=부정적, 1=긍정적)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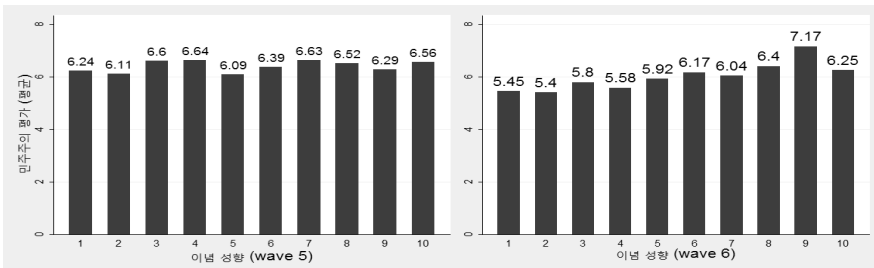
- 7) 개인의 재정상태 만족도(웨이브5의 V68과 웨이브6의 V59)는 10점 척도로 측정이 되었다(‘1=대단히 불만족한다.’ ~ ‘10=매우 만족한다.’). 성별(V240)은 이항변수이다(0=남성, 1=여성). 학력(V248)의 경우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1=정규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9=대학교), 학계에서 기존에 해온 방식대로 이를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즉, “중퇴” 카테고리를 없앴).

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통계적 비교는 어렵겠지만 경향성을 살피는 것은 가능하다. 2005년 민주주의 평가의 평균은 6.43이었는데, 2010년에는 5.96으로 감소하였으며 4점 이하의 부정적 평가가 약 10%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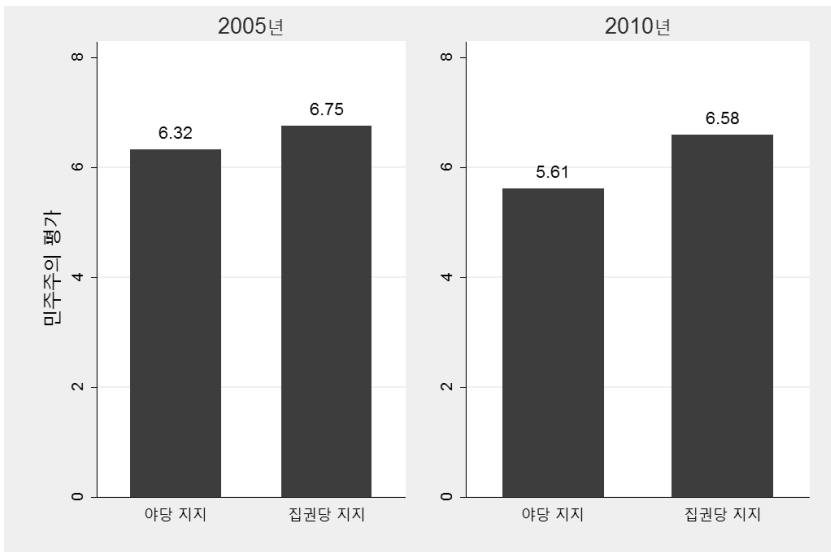
〈그림 1〉 2005년과 2010년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

그 다음 주요변수로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이념 성향과 민주주의 평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2>는 이념 성향의 각 값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평가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념 성향과 민주주의 평가 간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이념 성향의 차이가 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에 큰 변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2010년의 경우 이념 성향의 차이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2>의 2010년 그래프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진보 유권자들에 비해 더 높은 민주주의 평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2005년과 2010년 이념 성향과 민주주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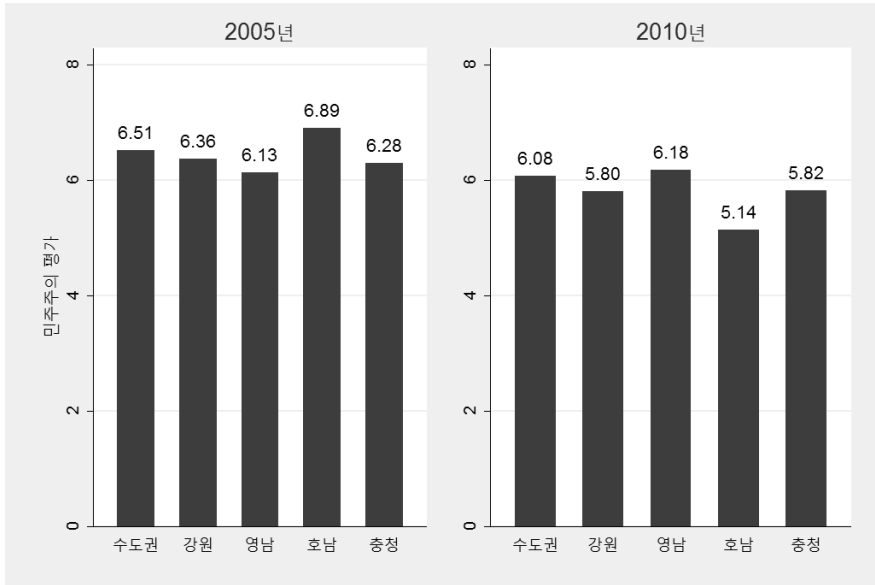
그 다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승자와 패자의 논리에 따른 민주주의 평가의 변화이다. <그림3>는 집권당 지지 여부와 민주주의 평가의 평균값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 평균 점수는 6.75였으나 집권당을 제외한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6.32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두 집단의 민주주의 통치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t=-3.49, p=0.00$ ). 이는 2010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당시의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을 지지한 경우 민주주의 평가 점수는 6.58로 야당 지지자들의 평가 평균인 5.61보다 훨씬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t=-8.40, p=0.00$ ).



<그림 3> 민주주의 평가와 승자-패자 논리: 집권당 지지여부

<그림 4>는 시민들의 거주지에 따른 민주주의 평가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호남과 영남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지역들에 비해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훨씬 컸다. 2005년과 2010년 모두 승자의 지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민주주의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패자의 지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영남과 호남에서 민주주의의 평가가 가장 낮은 양상을

보여 승자-패자의 논리와 지역 갈등이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4〉 민주주의 평가와 지역변수

이제 본격적으로 다변수 모델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표 1>은 본 연구의 첫 번째 회귀분석 결과이다. 가설 1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시민들이 진보적인 시민들보다 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 가설 1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즉, 2005년의 경우 개인의 이념 성향이 민주주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10년의 경우 가설 1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보수적인 시민들이 진보적인 시민들보다 민주주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결과가 서구의 연구에 기반을 둔 가설 1의 논리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만의 특수한 맥락에 의한 것인지를 이 결과만으로는 명확히 결론짓기 어렵다. 따라서 이념 성향이 민주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은 모델 IV까지 분석한 이후에 제시할 것이다.



〈표 1〉 한국 민주주의 평가의 결정요인 (모델 1): 이념 성향과 민주주의 평가

	웨이브5 (2005)		웨이브6 (2010)	
	Coef	(S.E.)	Coef	(S.E.)
이념 성향	0.012	0.030	0.061 **	0.029
강원	-0.158	0.243	-0.155	0.230
영남	-0.420 ***	0.119	-0.057	0.123
호남	0.199	0.141	-0.673 ***	0.178
충청	-0.368 **	0.184	-0.260	0.207
정치행위참여	0.000	0.026	-0.011	0.026
선거참여	0.193	0.122	-0.058	0.158
재정상태 만족도	0.159 ***	0.028	0.088 ***	0.029
인권 존중	1.255 ***	0.119	1.894 ***	0.124
성별	0.120	0.102	-0.135	0.103
연령	-0.006	0.006	0.013 ***	0.005
학력	0.033	0.074	0.015	0.079
상수	4.614 ***	0.516	3.417 ***	0.550
	N = 1181, R <sup>2</sup> = 0.159		N = 1094, R <sup>2</sup> = 0.260	

\*p<0.1, \*\*p<0.05, \*\*\*p<0.01

다음으로 지역효과를 살펴보자. 가설4의 예상은 승자-패자의 논리를 고려했을 때, 집권당의 주요 지지 기반을 구성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리라는 것이었다. 본 분석에서 기준지역은 수도권이다. 세계가치조사의 웨이브5의 조사 시기인 2005년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지지 기반은 호남이었으며, 경쟁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은 영남이었다. 2010년, 웨이브6의 경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야당의 주된 지지 기반은 각각 영남, 호남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민주주의 평가의 승자-패자 논리와 지역에 대한 가설4가 맞다면 2005년의 경우 호남 거주자들은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영남 거주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해야하며, 2010년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의 결과, 집권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지역 거주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그 경쟁당이자 야당의 주된 지지 지역에서는 기준 집단이었던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민주주의 통치 정도를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민주적 통치에 대한 지역 별 승자의 좋은 평가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패자의 나쁜 평가는 존재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서구나 한국의 어떤 연구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발견이라 하겠고, 이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이 결과에 근거하면, 연구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표 1>에서 2005년 웨이브 5의 경우 충청지역 거주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010년과 달리 2005년의 경우에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는 2005년 당시의 정치적 맥락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충청권에 행정수도의 건설’을 내걸었고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고 공포하였다.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수도이전시도가 축소·제한되고 말았다. 행정수도이전의 이슈가 충청권의 지역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처리되는 정치과정에서 충청권 거주자들이 강한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인 테스트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일 뿐이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한 바와 같이 자기의 재정상태에 만족한 사람, 즉 개인의 현재 상태(status quo)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중 연령만이 민주주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반면, 성별과 학력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웨이브6, 즉 2010년의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의 정부가 이명박 정권이었던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학력이 민주주의

평거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Kang (2015)의 결과와는 다르다. 즉, 그의 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기서 Kang(2015)이 사용했던 아시아바로미터(Asiabarometer) 데이터는 개인의 이념이나 승자-패자의 논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논의 하도록 하겠다.

<표 2>는 본 연구의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가설 2는 이념적으로 온건한 시민들보다 이념적으로 극단적 성향을 가지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를 낮게 평가할 것이라 보았다. 이 모델은 이념의 극단성이 민주주의 평가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결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표 2>에 정리된

<표 2> 한국 민주주의 평가의 결정요인 (모델 II): 이념 극단성과 민주주의 평가

	웨이브5 (2005)		웨이브6 (2010)	
	Coef	(S.E.)	Coef	(S.E.)
이념 극단성	0.007	0.013	0.003	0.011
강원	-0.156	0.239	-0.174	0.225
영남	-0.420 ***	0.119	-0.045	0.123
호남	0.200	0.141	-0.701 ***	0.177
충청	-0.365 **	0.183	-0.285	0.208
정치행위참여	-0.002	0.026	-0.016	0.026
선거참여	0.195	0.121	-0.032	0.157
재정상태 만족도	0.160 ***	0.028	0.089 ***	0.029
인권 존중	1.256 ***	0.119	1.928 ***	0.123
성별	0.120	0.101	-0.123	0.105
연령	-0.006	0.005	0.014 ***	0.005
학력	0.034	0.074	0.016	0.080
상수	4.640	0.496	3.620	0.542
	N = 1181, R <sup>2</sup> = 0.159		N = 1094, R <sup>2</sup> = 0.256	

\*p<0.1, \*\*p<0.05, \*\*\*p<0.01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두 웨이브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이념의 극단성 변수가 민주적 통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민들은 이념 성향이 극단적이라 할지라도 온건한 이념 성향을 가진 시민들에 비해 주류 정치에 대해 더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구 유권자들과는 다른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제 <표 3>에 나오는 모델을 가지고 가설 3을 검증하고자 한다. 모델 III는 각각의 시기에 집권당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민주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3>을 보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수집되었던 2005, 2010년 모두 당시 여당의 지지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높이 평가하

<표 3> 한국 민주주의 평가의 결정요인 (모델 III): 집권당 지지와 민주주의 평가

	웨이브5 (2005)		웨이브6 (2010)	
	Coef	(S.E.)	Coef	(S.E.)
집권당 지지	0.226 **	0.113	0.491 ***	0.112
강원	-0.143	0.241	-0.124	0.228
영남	-0.406 ***	0.119	-0.089	0.122
호남	0.160	0.143	-0.554 ***	0.182
충청	-0.385 **	0.182	-0.242	0.209
정치행위참여	0.000	0.026	-0.006	0.025
선거참여	0.197	0.122	-0.056	0.159
재정상태 만족도	0.158 ***	0.028	0.079 ***	0.029
인권 존중	1.232 ***	0.118	1.881 ***	0.123
성별	0.118	0.101	-0.105	0.102
연령	-0.005	0.005	0.011 **	0.005
학력	0.031	0.074	0.019	0.079
상수	4.604 ***	0.497	3.641	0.538
	N = 1183, R <sup>2</sup> = 0.159		N = 1094, R <sup>2</sup> = 0.273	

\*p<0.1, \*\*p<0.05, \*\*\*p<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에 따르면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을, 2010년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민주적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모델 III의 분석은 가설 3이 지지됨을 보여준다. 즉, 2005, 2010년 모두 집권당을 지지했을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도 앤더슨과 길로리(Anderson and Guillory 1997)가 주장했던 승자-패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를 묻는 질문을 접했을 때, 응답자들은 집권여당을 포함한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모델 I, II, 와 III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이념 성향과 지지정당 외에 한국에서 민주주의 평가에 기여하는 변수들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위에서 이야기한 모델 I과 마찬가지로 모델 II와 III에서도 ‘지역적 특성’,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개인적 평가’, ‘개인의 재정상태 만족도’, ‘연령’ 등이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델 IV에서는 개인의 이념 성향, 이념의 극단성과 지지정당 세 가지 변수를 모두 한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다른 주요 독립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특정 독립변인이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소위 덜 명시된 모델(underspecified model)을 피하고, 완전히 명시된 모델(fully specified model)을 보이려고 하는 시도이다. <표 4>는 모델 IV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모델 IV의 결과는 <표 1>, <표 2>, <표 3>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즉, 한국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에 이념의 극단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지하는 정당, 지역성, 재정상태 만족도,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 연령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네 가지 다른 모델에서 같은 결과를 얻었으므로, 위에서 보인 우리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어도 될 것 같다.

〈표 4〉 한국 민주주의 평가의 결정요인 (모델 IV): 이념 성향, 이념 극단성, 집권당 지지와 민주주의 평가

	웨이브5 (2005)		웨이브6 (2010)	
	Coef	(S.E.)	Coef	(S.E.)
이념 성향	0.014	0.031	0.036	0.031
이념 극단성	0.007	0.013	0.002	0.012
집권당 지지	0.218 *	0.114	0.451 ***	0.118
강원	-0.121	0.241	-0.124	0.233
영남	-0.400 ***	0.119	-0.095	0.122
호남	0.170	0.142	-0.527 ***	0.183
충청	-0.373 **	0.183	-0.236	0.209
정치행위참여	-0.001	0.026	-0.001	0.025
선거참여	0.185	0.122	-0.089	0.158
재정상태 만족도	0.159 ***	0.028	0.075 ***	0.029
인권 존중	1.240 ***	0.119	1.860 ***	0.123
성별	0.114	0.102	-0.118	0.104
연령	-0.006	0.006	0.010 **	0.005
학력	0.035	0.074	0.009	0.079
상수	4.505 ***	0.517	3.584	0.547
	N = 1181, R <sup>2</sup> = 0.161		N = 1094, R <sup>2</sup> = 0.270	

\*p&lt;0.1, \*\*p&lt;0.05, \*\*\*p&lt;0.01

위의 간단한 모델에 비해서 모델 IV에서 유일하게 다른 결과를 보인 변수가 “이념 성향” 변수이다. 위의 모델 I의 2010년 데이터의 분석에서는 이념 성향이 민주주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델 IV의 경우 그 통계적 중요성이 사라졌다. 즉 이념성향과 지지정당 변수를 같은 모델에 넣었을 경우, 이념 성향이 민주주의 평가에 주는 영향이 없어졌다. 이는 모델I의 분석 결과가 가설1을 설정할 때 제시한 서구 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적 근거, 즉 현상 유지를 원하는 보수적 이념과 민주주의 평가 사이의 관련성에 의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보다는 한국 정치에서 정당 지지의 성향이 이념 성향과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델1의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부연하자면, 모델I에서 2010년의 경우 보수적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더 높이 평가한 이유는 당시 집권당이 보수정치를 표방했던 한나라당이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념 성향” 변수가 “지지 정당” 변수와 유사성이 높은 변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델I에서 2005년에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위의 주장이 맞는다면, 2005년에는 보수적인 시민들과 비교했을 때 진보적인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긍정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어야 한다. 해당 질문은 당시 시민들이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답해야 할 것 같다. 세계가치조사의 웨이브5는 2005년 12월초에 실시가 되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의 추이를 보면, 취임 직후였던 2003년 3월 71.4%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세를 탄다.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잠시 올라갔던 지지도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5년 11월, 즉 웨이브5 직전에 24.3%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추락을 계속하여 2006년 12월엔 최저점인 6.8%를 기록하기까지 하였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5). 즉,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자기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다수 시민들 사이에서조차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으며 그 결과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도 보수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모델 III과 IV에 나타나는 “집권당 지지” 변수는, 데이터가 수집되었던 시점에서 아직 집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의견이므로,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념의 유사성”으로부터 오는 높은 평가는 집권당의 성취도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것이고 “집권당 지지”의 경우 정권의 성취도가 떨어지면 전체 유권자 중 지지자의 비율은 줄 수 있는 반면, 아직 집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높은 평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 V.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우리는 특히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최근 몇 년간 좌

우 이념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균열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각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들과 온건한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서구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선거에서의 승자인 집권당 지지자들이 정부의 민주적 통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한 승자-패자의 논리를 한국 정치의 주요 균열인 지역균열과 함께 고려하여 민주주의 평가에 대한 지역적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승자-패자의 논리에 대한 가설을 살펴본 결과 예측한 대로 집권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평가가 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설문 응답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즉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평가할 때 민주주의 자체의 원칙보다는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가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Linde and Ekman 2003).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지역성과 민주주의 평가 사이의 연관성일 것이다. 위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집권당의 지지기반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특별히 높이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었다. 즉, 다수제적 제도 하에서 시민들 간 갈등이 양극화되어 있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들은 일단 자기 지역정당이 선거에 승리하고 나면 그 자체를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된 지지를 받는 ‘지역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승자-패자의 논리에서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정당이 집권당이었을 경우와 관련된 모델분석에서 도출한 결과와 대비가 되면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집권당을 지지하는 ‘승자’가 그렇지 않은 ‘패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정당의 승리구도와 관련된 지역성의 경우 야당의 지지기반만이 정부의 민주적 통치에 대해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심리 등을 고찰함으로써, 왜 지역성에 관한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위의 결과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지적하겠다. 위의 승자-패자/지역성의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는 수도권 지역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여당 강세 지역의 유권자들이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반면, 야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수도권 지역의 유권자들에 비해 민주주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분석의 정확한 해석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한국의 지역성을 논할 때는 호남과 영남 유권자의 선호나 평가가 일반적인 한국의 유권자들과 다른가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영남과 호남의 유권자들의 선호도나 행태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이미 대다수의 정치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고, 그리하여 영남이나 호남 중 하나를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할 이유는 없다. 또 영호남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과 다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을 강원, 충청, 제주 등으로 설정하는 것도 그리 매력적인 선택은 아니다. 그러면 결과를 해석할 때 “영남지역의 유권자들은 (예를 들어) 강원지역의 유권자들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반면, 호남지역의 유권자들은 강원지역의 유권자들과 유사하다” 등의 결과를 내어 놓아야할 것이다. 위의 이유들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한국의 지역성 연구는 수도권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였다. 수도권에 유권자의 절반이 집중이 되어있고, 각 지역 출신들이 모여서 사는 ‘용광로’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가장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겠다.<sup>8)</sup>

한국의 선거에서 2000년대 이후 유권자의 선택요인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3대 요소는 지역성, 이념, 세대효과이다(Kim et al. 2008).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들 중 지역성과 세대효과는 지지정당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념 성향의 경우는 지지정당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면 이념성향의 극단성은 지

---

8) 만약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한국의 일반적 유권자들과 선호나 민주주의 평가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 가설 4의 분석에 대한 해석은 달라져야할 것이다. 즉,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집권 정당과 상관이 없이 여당 강세지역의 유권자들과 민주주의를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 반면, 야당 지역의 유권자들과는 민주주의 평가가 다를 것이다. 이 가능성은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기로 하겠다.

지정당과 상관없이 민주주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변인들의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 승자-패자의 논리와 연관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지의 여부와 가장 크게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말한 서구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의 가설과 달리 한국에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한국의 경우 양극적 진영논리가 강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보수성향을 가진 시민일지라도 한나라당의 집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극단적인 진보성향을 가진 유권자도 열린우리당의 집권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베이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연구의 한계는 특정 서베이 데이터에서 물어보는 문항만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서로 다른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 연구자들이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셋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변인을 모델에 투입하여 데이터 셋에 관계없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는 것이다. 둘째, 한 데이터 셋으로만 테스트할 수 있는 변인들을 여러 다른 시점에서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다. 첫 번째의 예로 우리는 정당지지와 민주주의 평가를 분석하였고, 기존연구, 특히 서구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의 예로 우리는 극한 이념을 가진 시민들의 민주주의 평가가 더 낮은지 여부를 두 개의 웨이브를 활용하여 테스트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결국 민주주의 평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데이터 셋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를 모두 비교해서 축적된 지식을 통해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 참고문헌

- 강신구. 2012. “어떤 민주주의인가?: 제도과 가치체계의 조율을 통해 바라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3호, 39-67.
- 강원택. 2010. 지역주의는 약화되었을까: 지역주의와 2007 년 대통령 선거. 『한국 선거정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서울:나남. 49-74.
- 강우진. 2013.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이명박 정부의 사례”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3호, 173-202.
- 김용철 · 조영호. 2015. “지역주의적 정치구도의 사회심리적 토대.”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1호, 93-128
- 문우진. 2017. “한국 정치제도와 설계방향: 이론적 접근.” 『현대정치연구』, 제9권 1호, 41-74.
- 송두리. 2014. 『정치참여가 민주주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조영호 · 조진만 · 김용철. 2013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과정과 결과.”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3호, 63-81.
- 지병근. 2015. “민주화 이후 지역감정의 변화와 원인.” 『한국정당학회보』, 제 14권 1호, 63-91.
- 최준영. 2008. “지역감정은 존재하는가?: 지역감정에 대한 간접측정 기법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 1권 1호, 199-222.
- 홍재우. 2006.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정치제도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1호, 25-47.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5. K-Poll(국정운영지지도). <http://www.kosscda.or.kr/kpoll/government.asp> (검색일: 2017.07.30)
- Aarts, Kees, and Jacques Thomassen. 2008. "Satisfaction with Democracy: Do Institutions Matter?" *Electoral Studies* 27:1, 5-18.
- Agnafors, Marcus. 2013. "Quality of Government: Toward a More Complex Defin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7:3, 433-445.
- Anderson, Christopher J., and Christine A. Guillory. 1997. "Polit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01, 66-81.

- Anderson, Christopher J., and Yuliya V. Tverdova. 2001. "Winners, Losers, and Attitudes about Government in Contemporary Democrac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4, 321-338.
- Bjornskov, Christian, Axel Drehe, and Justina AV Fischer. 2008. "On Decentra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Economics Letters* 99:1, 147-151.
- Blais, André, and François Gélinau. 2007. "Winning, Losing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Political Studies* 55:2, 425-441.
- Campbell, Ross. 2015. "Winners, Losers and the Grand Coalition: Political Satisfaction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6:2, 168-184.
- Carothers, Thomas. 2003.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13:1, 5-21.
- Curini, Luigi, Willy Jou, and Vincenzo Memoli. 2014. "How Moderates and Extremists Find Happiness: Ideological Orientation, Citizen - Government Proximity, and Life Satisfac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5:2, 129-152.
- Dahlberg, Stefan, and Jonas Linde. 2016. "Losing Happily? The Mitigating Effect of Democracy and Quality of Government on the Winner - Loser Gap in Political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9:9, 652-664.
- Dorn, David., Fischer, J. A., Kirchgässner, G., and Sousa-Poza.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3, 505-526.
- Easton, David. 1965.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and Sons.
- Farrell, David M., and Ian McAllister. 2006. "Voter Satisfaction and Electoral Systems: Does Preferential Voting in Candidate Centred Systems Make a Differe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5:5, 723-749.
- Frey, Bruno S. and Alois Stutzer.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402-435.
- Fukuyama, Francis. 2013. "What is Governance?" *Governance* 26:3, 347-368.
- Greenberg, Jeff, and Eva Jonas. 2003. "Psychological motives and political orientation - the left, the right, and the rigid: comment on Jost et al.(2003)."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76-382.

- Helliwell, John F. and Haifang Huang.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595-619.
- Hobolt, Sara. B. 2012. "Citize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0(s1), 88-105.
- Hofferbert, Richard I., and Hans - Dieter Klingemann. 1999. Remembering the Bad Old Days: Human Rights, Economic Conditions, and Democratic Performance in Transitional Regim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6:3, 155 - 174.
-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ang, WooJin. 2015. "Inequality, the Welfare System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6:5, 493-509.
- Kim, HeeMin, Jun Young Choi, and Jinman Cho. 2008. "Changing Cleavage Structure in New Democracies: An Empirical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in Korea." *Electoral Studies* 27:1, 136-150.
- Kim, HeeMin, G. Bingham Powell Jr, and Richard C. Fording. 2010. "Electoral Systems, Party systems, and Ideological Representation: An Analysis of Distortion in Western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s* 42:2, 167-185.
- Linde, Jonas, and Joakim Ekman. 2003.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Note on a Frequently Used Indicator in Comparative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2:3, 391-408.
- Li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cAllister, Ian. 2008. "Public Support for Democracy: Results from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Project." *Electoral Studies* 27:1, 1-4.
- McClosky, Herbert, and Dennis Chong. 1985.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Left-wing and Right-wing Radical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5:3, 329-363.
- McDonald, Michael D., Silvia M. Mendes, and Ian Budge. 2004. "What are Elections for? Conferring the Median Mandat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1, 1-26.
- Napier, Jaime L., and John T. Jost. 2008. "Why are Conservatives Happier than Liberals?"

- Psychological Science 19:6, 565-572.
- Norris, Pippa. (Ed.).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2011. *Democratic Deficit: Critical Citizens Revisi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skeviciute, Aida. 2009. "Partisanship and System Support in Established and New Democracies." John Bartle and Paolo Bellucci, eds. *Political Parties and Partisanship: Social Identity and Individual Attitudes*. London: Routledge. pp.121-141.
- Rothstein, Bo. 2011. *The Qu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Social Trust, and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avits, Margit. 2008. "Representation, Corru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12, 1607-1630.
- Taylor, Paul, Cary Funk, and Peyton Craighill. 2006. *Are We Happy Yet?*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 Wagner, Alexander F., Friedrich Schneider, and Martin Halla. 2009. "The Quality of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Western Europe—a Pane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5:1, 30-41.
- Wu, Chin-en., and Yun-han Chu. 2007. "Income Ine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Evidence from East Asia." *A Comparative Survey of Democracy, Governance and Development, Asian Barometer, Working Paper Series* 42.
- Zmerli, Sonja, and Ken Newton. 2008. "Social Trust and Attitudes toward Democracy." *Public Opinion Quarterly* 72:4, 706-724.

투고일: 2017.06.11.    심사일: 2017.07.26.    게재확정일: 2017.07.26.

## A What Makes Korean Citizens Support Democracy? An Analysis of Democratic Support Based on the Logic of Winning/Losing, the Regional Support Base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ersonal Ideology

Kim, Hee Min • Song, Du ri • Sung, Yae jin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manuscript, we focus on three particular aspects of the citizen assessment of democracy in Korea. First, we study the impact of individual citizen's ideology on the assessment of democracy, as the left-right ideology has become an important cleavage in Korean society for the past decade.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whether those with extreme ideology have different assessment of democracy from those with moderate ideology. Second, we check if the winners of elections (the supporters of governing party) tend to assess the democracy more highly than the losers, as was found in many studies of the Western democracies. Further, we are curious about whether the regional character of the winning/losing parties also has independent impact on the citizen's assessment. To test our hypotheses, we perform regression analyses utilizing the two latest waves (2005 and 2010) of the World Values Survey data. Our analyses show the following: supporters of the governing party tend to assess the democracy in Korea more highly than those of the opposition. We interpret this result that citizens think of their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or governing party when asked to assess the democracy; those living in the regional support base of the governing party do not particularly rate the level of democracy highly, while those living in the opposition stronghold tend to rate democracy poorly statistically speaking. That is we see negative result only as far as regionalism is concerned; extreme ideology does not seem to affect citizen assessment of democracy regardless of the parties they support. We conclude the paper by pointing out potential limitations of the empirical research based on survey data and by suggesting how we can overcome these limitations.

---

**Key Words** | Democratic Assessment, Individual Ideology, Extreme Ideology, the Logic of Winning-Losing, the Regional Support Base of Political Parties, the World Values Survey